

"석달 침 맞으면 합의금 많이 받게." 노골적 유혹

김동혁 기자 입력 2020.03.04 03:02

일부 한방병원 '車 보험사기' 조장



"합의금은 최대 얼마까지 원하세요?"

최근 서울 소재 한 한방병원을 찾은 기자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자 병원 관계자는 이 같이 되물었다. 그러더니 진료비 외에 합의금으로 최소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조건은 3개월 이상 약침 및 추나 치료를 받고 한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 원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붙여 경미한 장애등급 판정까지 도와주겠다고 했다. 700만 원 이상 합의금을 받으면 이 중 300만 원을 손해사정사에게 건네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 근절되지 않는 한방병원 보험사기

일부 한방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1번째 확진자 A씨가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 중 잦은 외출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한방병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3576억 원이었던 교통사고 관련 한방진료비는 지난해 9569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5545억 원)을 기준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한방병원의 1인당 평균 통원 진료비도 2018년 기준 57만5000원으로, 양방병원(18만4000원)의 3배에 이른다.

많은 한방병원들이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임을 내세우며 '본인부담금 0원' 등의 광고를 내걸고 있다. 미리 제조한 한약 침수 일부를 진료 직후 환자에게 제공하며 과잉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추나 치료가 필수적인 것으로 위장해 병행하는 경우도 많다.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미한 사고 시 고액 보상을 위한 합의 요령'까지 전파되고 있다.



한방병원을 둘러싼 보험사기도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한방병원 이사장 B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 수감됐다.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3년에 걸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보험금 등 총 3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사무장병원 운영 및 보험사기 등)였다.

B 씨 등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은 뉘 이들과 공모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불필요한 한약 처방, 과잉 진료비 청구를 위한 허위 치료 등도 함께 진행했다. B 씨와 공모한 병원장과 원무부장, 허위 입원 환자 등 7명은 법정 구속되거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입원 전문 브로커를 직원으로 고용한 뒤 허위 환자를 유지한 광주시의 한방병원장이 징역 2년형을 받고 구속된 사례도 있다. 병원장 C 씨는 입원 전문 브로커 5명을 원무과 직원으로 고용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며 유치를 독려했다. 이렇게 모인 74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 과다, 입원 치료를 주도하며 총 9억10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 보험수가 정비하고 처벌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양방의 경우 대다수 진료가 급여 항목으로 편입돼 있어 구체적인 진료 횟수와 처방, 투약 등이 규정되지만 한방은 비급여가 대다수다. 그렇다 보니 명확한 기준 없이 의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4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추나 요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것도 진료수가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병원이나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처벌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보험사기로 얻은 보험금의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 장윤정 기자

금융

"車사고 당했죠, 침·부항·추나·한약 풀세트 하시죠"

조선일보 <기획취재팀> 김태근 기자 김은정 기자 이기훈 기자 김유아(칭화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인턴기자 김하나(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인턴기자 임진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인턴기자 장근욱(연세대 경제학과) 인턴기자

입력 2019.08.05 03:03 | 수정 2019.08.06 10:20

[공공의 적, 보험사기] [2] 자동차보험 '추나 폭탄'

"시간이 별로 없는데, 추나는 빠고 침이나 물리치료만 하면 안 되나요?"

"침, 추나, 부항, 물리치료 이렇게 세트로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어차피 자동차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다 내줄 텐데 왜 굳이 안 하려고 해요? 이런 환자 별로 없는데...."

최근 서울 대방동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앞차에 받힌 김모(28)씨는 한의원을 찾았다가 '세트 치료'를 권유받고 원하지도 않는 추나(推拿) 치료(손과 팔 등으로 하는 한방 물리치료)를 받았다. 옆드려 눕자 한의사가 목과 어깨를 꺾꺾 누르며 여러 차례 심호흡을 시켰다. 근육이 뭉쳐 있으니 꾸준히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다. 걸린 시간은 6분가량. 김씨가 받은 '단순 추나' 시술비 2만2332원은 병원을 통해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됐다.

교통사고를 당해 수도권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한 박모(38)씨도 다른 치료와 함께 하루 한 번씩 추나를 받고 있다. 시술 후에는 몸이 개운한 느낌도 들지만, 3~5분 시술 한 번에 2만~5만원인 추나를 제 돈 내고 받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 한방병원에 입원한 70여명의 환자 가운데 약 80%가 자동차보험에서 진료비가 나오는 교통사고 환자였고, 얘기를 나눈 환자 5명 모두 추나를 포함한 '세트 치료'를 받고 있었다.

◇'추나 폭탄'에 떨고 있는 보험업계

자동차 사고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진료비에서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23%에서 2018년 36%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들어 상반기까지 청구된 금액은 양방(洋方) 59%, 한방(韓方) 41%로, 한방 진료비가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양방 진료비는 2015년 1조1981억원에서 작년 1조2623억원으로 3년 새 5%(642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한방 진료비는 같은 기간 3576억원에서 7139억원으로 거의 2배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황당한 진료사례

2016년 10월 경미한 추돌 피해자 K씨.
목과 허리가 빠졌다고 올해 6월까지 총 150회
한의원에서 치료 후 진료비 총 943만원 청구.

양방	12만원
한방	
진찰 및 검사료	78만원
한방약제	169만원
침술	216만원
구술	64만원
부항술	88만원
온냉경락요법	24만원
한방물리요법	98만원
추나요법	163만원
첩약	31만원
합계 진료비	943만원

자료=손해보험협회

전국 한의원·한방병원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원·한방병원 비중은 2015년이나 2018년이나 15.7%로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한방 진료비가 매년 약 1000억원씩 불어나는 이유가 뭘까.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일부 한의원·한방병원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이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비교적 고가 진료인 추나요법을 포함해 첩약(한약)과 한방 물리치료, 약침 등을 '세트'로 묶어 진료하면서 전체 한방 진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추나의 경우 작년 한 해에만 717억원이 청구돼 전년보다 1.5배 급증했다.

지난해 초 구로구에서 난 경미한 추돌 사고로 앞차 뒤차 모두 번호판만 살짝 긁혀 수리조차 하지 않았는데 조수석에 탔던 동승자(42)가 450만원 진료비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동승자는 목과 허리가 빠근하다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한방병원을 포함한 3곳의 한의원·한방병원에 다니기 시작, 총 69차례 진료를 받았다. 진료비 청구 내역에는 침술, 부항, 첩약, 한방 물리요법, 추나 등이 빠짐없이 포함돼 있었다. 정작 운전자(33)는 사

흘간 병원에 다니며 진료비 7만원을 청구한 게 다였다.

이에 대해 대한한 의사협회 관계자는 "양방 기준으로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몸이 망가진 환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한의사들이 경증 환자에게도 과잉 진료하는 듯 말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추나요법 시술 시간은 환자 상태, 의사 숙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짧다고 진료를 대충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방 車보험 진료비, 3년 새 2배 급증

건강보험에 비해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酬價·서비스 가격) 기준이 허술하기 짝이 없어 일부 병·의원의 과잉 처방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수가 기준은 특정 증상에 쓸 수 있는 약을 하루 용량 몇 mg, 상한 금액 얼마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의원이 임의로 이 금액을 초과해 과잉 진료를 할 수 없다.

반면, 국토부가 고시하는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한방 침약(1침당 6690원)을 투여하여야 하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 횡수나 용량, 상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병의원들이 자동차보험 환자들을 대상으로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목 부위 인대가 늘어나거나 뻐 환자에게 대부분의 한의사는 약침을 10번 이내로 놓지만, 104번이나 약침을 놓았다며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시술 횡수나 시술 기간 같은 최소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청구한 진료비가 과다한지 아닌지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이런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험사, 의료기관, 공익대표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사후 심사를 했지만, 2013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기능이 위탁된 후 자동차보험 수가 세부 심사 기준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AD [화제] "혈당 체크는 끝났다" 당뇨 병원 안 가도 돼..의학계 발칵!

AD 신형 "그랜저" 출시 후 5년간 타고나면 "공짜"로 준다?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급여화된 추나 현장가보니..."침·뜸 패키지로 받으세요"

일선 한의원들, 환자문의 증가 대비 전용 베드 구비

황병우 기자 기자 (news@medicalltimes.com)

기사입력 : 2019-04-10 06:00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목이 빠근해서 추나치료 받으러 왔는데요..." "추나가 최근에 진료비 부담이 낮아졌어요. 추나요법과 함께 침·뜸 패키지로 하시겠어요?"

메디칼타임즈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이틀째를 맞이한 지난 9일, 한의원을 직접 찾아가봤다.

실제 한의원에 방문해 추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자 기존보다 진료비 부담이 없어져 다른 진료와 병행하면 더 예후가 좋아질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의원 직원에 따르면 진찰이 필요하지만 비급여로 시행됐을 때 가격이 천차만별일 때와 달리 일반적으로 단순추나, 복합추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만700원~1만8000원 내에서 가능하다.

세부항목에 따른 진료비 및 검진비	
구분	행목 및 비용
준비료/진찰 / 불면진	20,000~51,500원
진찰/진찰료	92,700원
추나요법	추나요법(급여) 11,160~30,170원 추나요법(비급여) 22,340~57,810원
추나요법 가격	
* 추나치료 1회 30,900~51,500원	
* 치료 비용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진단과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추나를 시행하던 한의원은 건강보험 적용(추나치료 급여화)을 내세우며 환자 홍보에 열을 올린 반면, 추나를 하지 않던 한의원은 전용베드를 준비하며 향후 환자증가를 대비하고 있었다.

서울소재 A한의원 원장은 "추나베드가 없어도 치료에 문제는 없지만 건보적용 이후 환자 문의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전용베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나베드의 가격이 개당 200만~2000만원을 호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급여화에 따른 한의계 개원가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한 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추나의 건보적용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나베드를 구비할 수 있지만

협회는 추나를 못하는 곳은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추나베드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기대로 무분별하게 추나를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추나베드가 없어도 추나치료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추나치료는 추나베드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한 모습.

추나만 가능한가요? 질문에 "다른 치료도 같이"

한의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추나의 건강보험 적용을 알려주는 포스터. 근골격계 질환 등에 건보가 적용되면 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문구로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보적용 이후 실제 진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급여 이진에도 하루에 20명 넘게 추나를 시행해왔다는 한의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아봤다.

진료실에 들어가 목이 불편다고 상담을 했더니 진단과 함께 추나 치료 외에 침 치료도 같이하는 게 어떻겠냐는 질문이 돌아왔다. 대개 침 치료, 전기치료, 뜬 치료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처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

추나만 받는 것도 가능하냐고 질문했지만 "가능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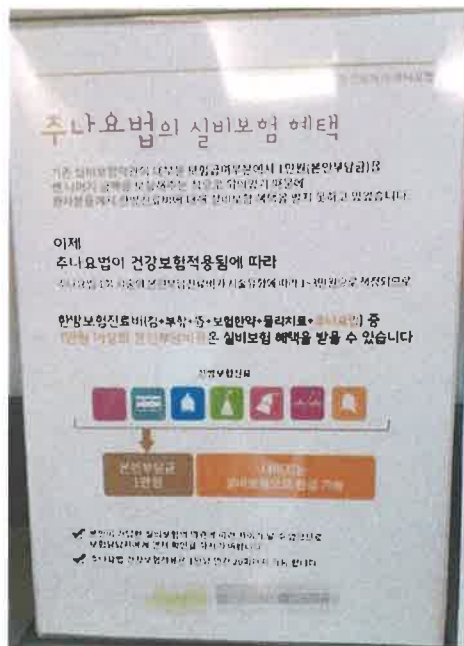


추나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다른 치료와 병행하는 치료를 권해 함께 치료를 실시했다.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최초 추나치료를 받으러 방문했지만 예후가 더 좋아진다는 말에 모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앞으로 추나 건보적용에 따라 한의원의 근골격계질환 치료의 경우 기존 침·뜸·부항 치료에 추나가 추가되거나 추나치료에 침·뜸·부항치료가 더해지는 패키지 형식으로 치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모든 치료를 받고나니 진료비가 2만1200원이 나왔다. 비급여 당시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줄어든 액수다.



추나요법 실비보험혜택을 설명한 포스터.

다만, 추나치료 본인부담금만 생각하고 방문했던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추가지출이 있었다. 또 일반적으로 한 번의 방문으로 치료가 끝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진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추나 건보적용은 환자 1인당 연 20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한의사가 진찰시 치료소견에 따라 주 2~3회 내원 치료를 받으면 약 한달만에 건보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하는 꼴이다.

추나요법이 강조하는 근골격계, 디스크와 협착 등의 치료는 단순통증이 아닌 이상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남용할 경우 비급여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한편, 추나요법 건보적용으로 실비보험 혜택이 가능했다는 점도 이색적인 풍경 중 하나다.

이날 방문한 한의원 직원은 추나요법 1회 시술의 본인부담진료비가 시술유형에 따라 1만~3만원으로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귀띔하며 혜택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한의원은 추나 급여화부터 실비보험까지 환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든든한 무기를 장착한 듯 보였다.

황병우 기자 (news@medicalltimes.com)

팔로우

교통사고 났을 때, 한방병원 가면 한약까지 지어준다고?



중앙시사매거진 2만 팔로워
2018.03.07. 09:30 8,629 읽음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가 경미하고 눈에 띄는 큰 부상이 없어도 병원을 찾게 마련이다. 그럴 때 요즘은 양방병원보다 한방병원을 더 많이 찾는다고 한다. 물리치료 뿐 아니라 기력회복에 좋다는 이유로 한약까지 지어주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가 지급되면서, 일부 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 모시기에 바쁘고 과잉진료까지 앞장서고 있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진료수가가 현실화된 이후 나타난 기저효과'란 주장과 '비급여항목을 노린 과잉진료'란 반론이 엇갈린다. 손해보험업계는 "한방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어렵다"고 치고 나온다. 의료현장에서 숨죽이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과잉진료'의 실체를 물었다..



■한방병원업계는 2014년부터 비급여 진료를 지렛대로 급속히 덩치를 불리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심평원은 무력하?만 하다.

지난해 가을, 회사원 김용훈(가명·41)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충돌사고를 당했다.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다른 차가 측면을 들이받았다. 뒷목이 빠근한 느낌이 들어 김씨는 보험 접수를 한 뒤 근처의 한방병원을 방문했다.

한의사는 이곳저곳을 살펴보더니 추나 치료와 뜸, 한약 복용을 권했다. 의사는 “몸의 기운을 복돋워야 후유증이 없다”며 “보험이 적용돼 자기부담은 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김씨는 “몸에 좋다는 보약을 공짜로 지어준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한방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방 치료와 보약은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원기를 회복해준다는 인식이 컸다. 하지만 비싼 진료비와 약제비용 때문에 자기 돈을 들이기엔 부담이 컸다.

그런데 2013년에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이 수가가 현실화되면서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한방병원들은 ‘공짜’를 강조하며 교통사고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이왕이면 한방 치료를 받는 게 낫다’는 인식이 이때부터 입소문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KIRI)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병원을 찾은 교통사고 환자 수는 2014년 12만8000명에서 2016년 21만3000명으로 66.4% 늘었다. 같은 기간 양방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0.9%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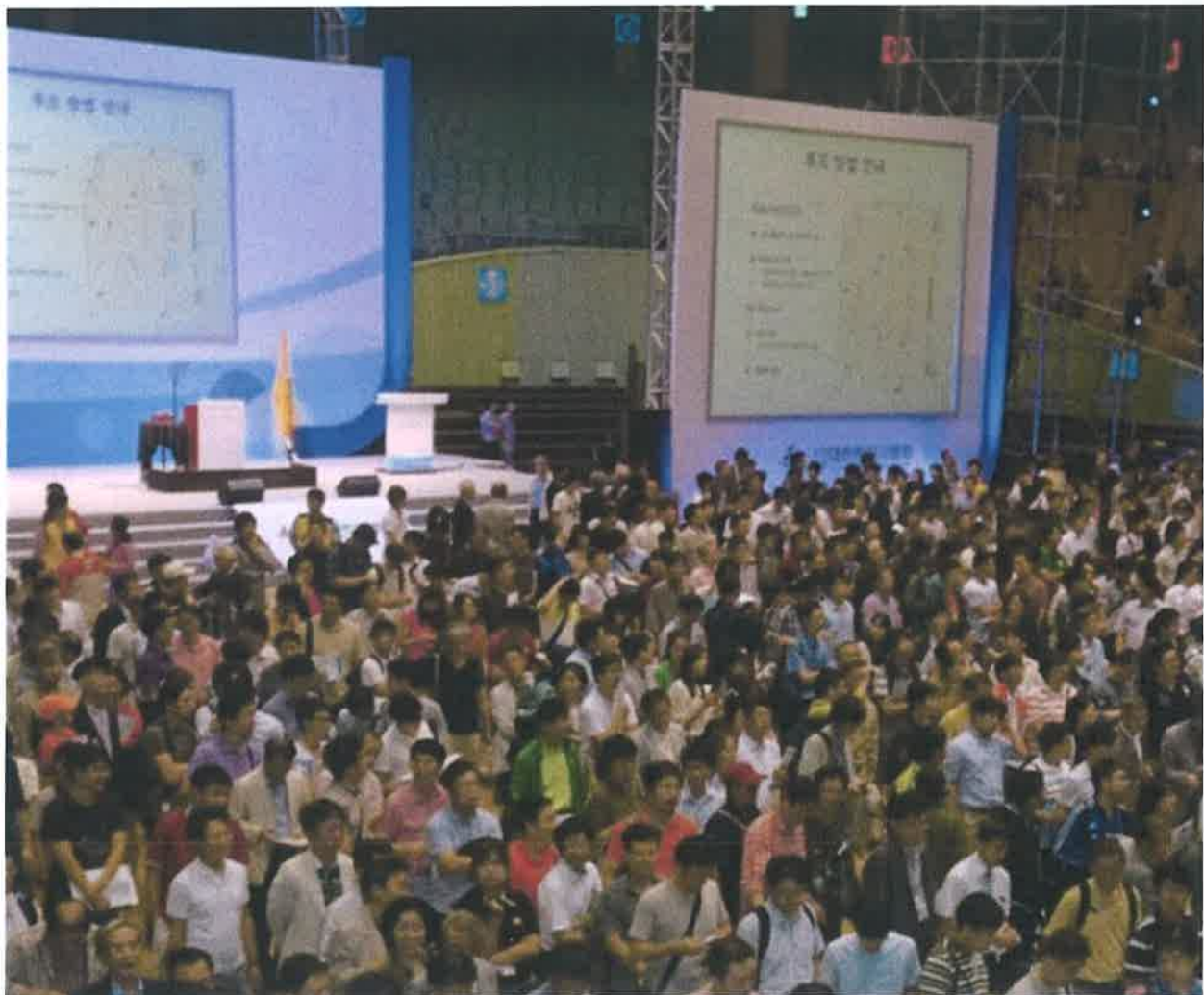
송 연구위원은 “2014년부터 자보 한방 진료비 심사기준이 명확해지면서 한방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적용 기준이 바뀐 건 2013년 6월부터다. 국토교통부는 추나요법, 약침 등 비(非)급여 항목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첩약(탕약) 수가도 한 첩당 4870원에서 6690원으로 40% 가량 올랐다.

교통사고 환자는 하루 2첩, 10일 분량(13만3800원)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호재를 만난 한방병원들은 양방병원보다 나은 서비스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자동차보험 진료 분야는 한방병원에선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진료 항목이 대부분 비급여 대상이어서 추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 환자들은 한방보다 양방병원을 선호했다. 보험 급여 심사업무는 손해 보험사들이 직접 맡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그러다 2012년 국토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내면서 심사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했다. 심평원이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자주 한방 진료비 급증은 기저효과”라고 주장한다. 2013년 9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체육관에서 열린 대한의사 협회 회원총회 모습.

한방병원 과다한 ‘교통사고 환자 모시기’ 경쟁

한방병원 이용자가 늘면서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 규모도 덩달아 그게 뛰었다. 심평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사이 자동차보험 분야의 양방(의·치과) 진료비는 1조1512억원에서 1조1988억원으로 4%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한방(한방병원·한의원) 진료비는 2722억원에서 4598억 원으로 69% 급증했다.

한방병원의 진료비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도 30%로, 건강보험 비율(4%)의 8배에 육박했다. 서울 강남의 한 중형 한방병원의 경우 2014년 한 해에만 55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수익을 올렸다.

팔로우

한방 의료계에선 한방 진료 서비스를 경험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보고 있다. 박윤희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부회장은 “한의사는 질병을 보기 전에 환자를 본다는 점에서 한방진료의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환자들은 경증(輕症)이 많아요. 경증은 검사해 보면 대부분 이상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하지만 정작 환자들은 밤에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해합니다. 한의사들은 단순히 목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들을 통합적으로 치료합니다. ‘어, 한의사들은 좀 다르게 보더라’는 거죠. 한방진료 수요가 늘어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과거에는 멀쩡하면서도 보험금을 많이 타내려고 스스로 과잉진료를 요구하는 ‘나이롱 환자’가 많았지만, 한방 보험 적용 항목이 확대되면서 병원이 스스로 불필요한 진료를 추가해 보험금을 빼먹는 ‘과잉진료’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런 주장을 시인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년 가까이 한방 의료수가 문제에 관여해 온 모 한의대 교수 이모 씨는 “실제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주류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한의학계에서 이단아로 낙인찍혔다. 그는 “같은 병증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을 때 건보를 적용하면 3만원 나올 게 자보로 가면 6만~7만원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말이다.

“첩약을 지을 때 이 약제를 왜 써야 하는지 논리가 없어요. 자보수가기준에도 건보가 적용되는 약제를 우선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싼 비급여 약제를 고집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자동차보험 보장 항목에 금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보험 적용 기준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한방병원마다 처방이 일관되지 못한 실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대인(代人) 배상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통째서다. 보험개발원은 가장 가벼운 증상인 경추염좌 환자가 한방병원에 갔을 경우를 가정해 진료비를 산출해냈다.

경추염좌란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보험개발원 산출 결과, 첩약의 경우 한방병원 진료비 상위 10%의 평균이 29만9900원으로 하위 10%(6만7100원)의 4.5배를 기록했다. 척추·골반 등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은 상·하위 각각 10% 간 진료비 편차가 17.2배에 달했다.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

특히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이나 다름없다. 초음파·초단파요법 등 의료기기를 이용한 재활치

료법과 도인(導引)운동요법 등 수기요법이 한방물리요법에 해당한다. 같은 한방 비급여 항목이라도 침약과 추나는 진료수가가 정해져 있지만, 한방물리요법은 비용 기준조차 없다. 이 교수는 “추나가 1회 진료에 1만원도 안 되던 시절에 도인운동요법은 3만~4만원 받아갔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방병원들이 자동차사고로 내원한 환자에게 한방물리요법 처방을 늘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 결과 2016년 한 해에만 한방물리요법 진료비가 162% 증가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같은 해 전체 한방진료비 증가율(29.5%)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다.

진료비 기준을 두고 의료 현장의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를 새로 만들었다. ‘의료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만 진료수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부 기준이 없어 갈등 요소는 여전하다. 예를 들어 한의사가 도인운동요법을 1분만 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심평원은 이를 반려할 방법이 없다. 양방 도수치료의 경우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된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한방 사무장병원’은 규정의 빈틈을 파고들어 폭리를 취한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의료법상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한 현직 한의사는 “한방 사무장병원의 수익구조는 기본적으로 ‘박리다매’”라며 “진찰·침·뜸·부항 등을 다 시술하려면 환자 한 사람당 몇 시간씩 걸리는데 일부 한방병원에선 하루에 100명씩 진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의사의 직접 진료 시간 규정이 없으니 이렇게 해도 불법은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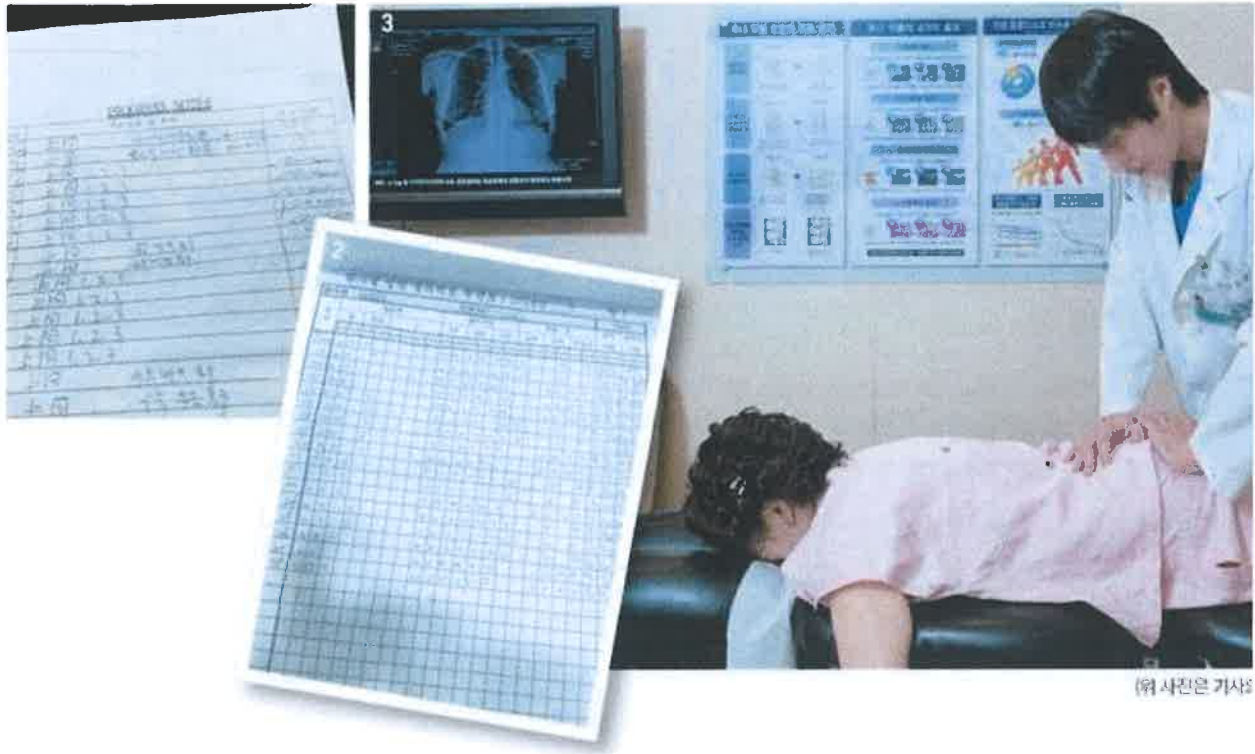
현장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한방병원이 환자당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당국은 이를 방관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송 연구위원도 “최근 한방진료비 급증은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 수뿐만 아니라 1인당 한방비급여 진료비(연평균 8.0%)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높은 환자 만족도’를 내세우는 한의사협회 측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어차피 교통사고 환자들은 자기 부담이 없으니 질환과 상관없더라도 건강상태를 검사해주고 한약도 지어주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공짜로 준다는데 싫어할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조사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의료기관이면 회복을 같은 지표로 따져야지, 세상에 만족도로 의료 수준을 평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과잉을 넘어 허위로 자보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의사 최모 씨는 “5년간 봉직으로 근무한 모든 한방병원에서 보험 사기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수차례 거절한 끝에 조심스럽게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팔로우

그는 “(허위 진료비 청구에 대해) 병원 내부에 문제 제기를 하자 동료 한의사들이 나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집단 구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의사 면허는 지금도 제 자부심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털어놨다.



(위 사진은 기사)

1. 최씨는 진료차트에 '추나 제외'를 수차례 적어뒀다. 그러나 병원 청구과장은 문구 하나하나를 모두 수정 테이프로 덧칠했다. 백한 차트 조작의 흔적이다. / 2. 최씨는 해당 환자에게 추나와 습부를 처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란으로 남아있어야 할 '추나' '습부' 줄에 동그라미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 3. 추나요법은 척추나 골반 등을 교정해주는 수기요법이다. 간강보혈에서는 비급진료지만, 자동차보혈에서는 2005년에 추나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정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허위진료 문제 제기한 동료 한의사 집단 폭행도

최씨는 2016년 3월 수도권의 한 중소 규모 한방병원에 들어갔다. 이전에 있던 병원에서 보험사기를 둘러싸고 경영진과 충돌했던 탓에, 최씨는 '환자별로 차트를 일일이 대조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약속받고 들어갔다. 병원 청구과에서 진료차트를 조작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청구과장 역시 “추나나 습부(부항요법의 일종)를 제외할 환자가 있을 때 사전에 알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제외하겠다. 결코 무리하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과장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차트 조작의 징후를 발견했다. 최씨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환자를 진찰한 뒤 추나요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청구과장에게 “추나와 습부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고서 진료차트에 서명했다.

15

1

팔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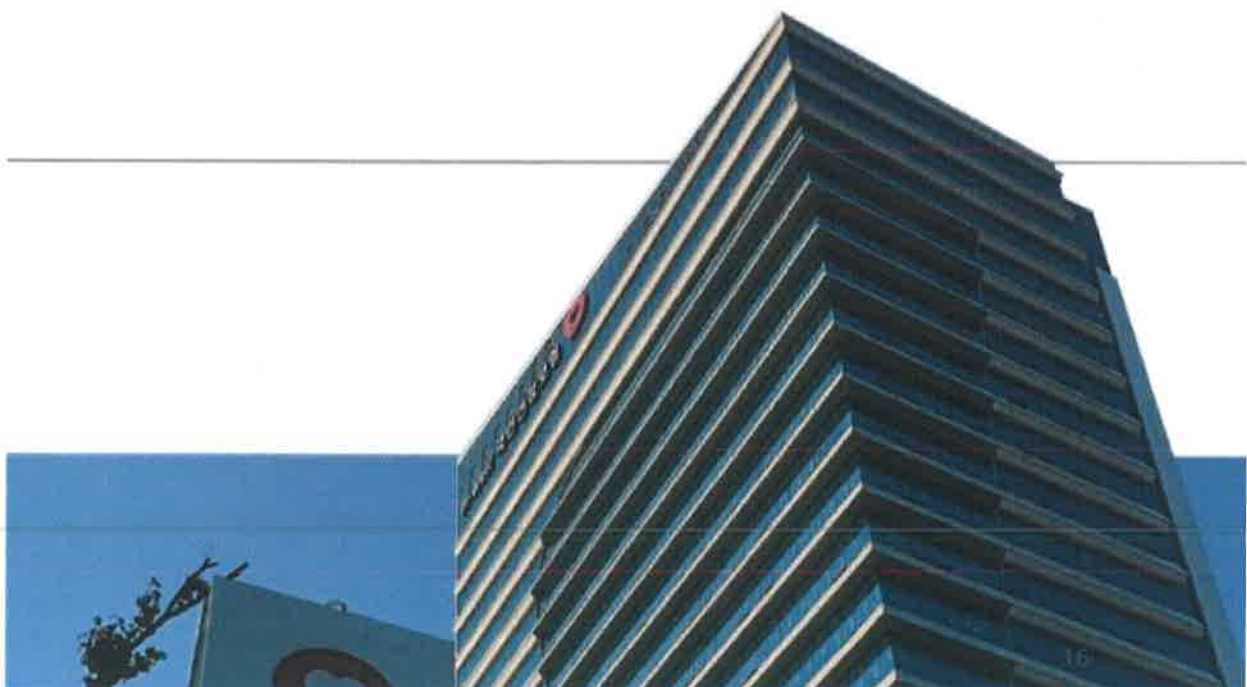
그러나 일주일 후 확인한 진료차트에는 '추나'와 '습부' 항목 선택란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최씨는 곧바로 청구과장에 항의하고 진료차트 뒷면에 '추나 제외'라고 재차 기재했다. 이후 다시 진료차트를 확인했을 때 '추나 제외'란 글씨는 수정 테이프로 지워져 있었다. 허위청구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최씨에 따르면 이 한방병원은 진료차트의 '추나' '습부' '건부' 항목을 공란으로 두고는 담당 한의사와 퇴원하는 환자의 서명을 먼저 받는다고 한다. 나중에 공란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허위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환자에게 보험사가 일일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허위청구를 적발해내기가 어렵다. 최씨는 병원에 근무한 한 달 남짓한 동안 40건의 조작 사례를 사진으로 찍어 수사당국에 넘겼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험범죄 대응 백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범들의 범행 수법 가운데 허위 입원이 285명(80.3%)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방병원을 연 뒤 '가짜 환자'들을 끌어 모은다.

본인 부담이 없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사기범들은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들을 치료한 것처럼 차트를 조작해 진료비를 청구한다. 최씨가 근무했던 한방병원은 가장 전형적인 방식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셈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업계는 1998년 이후 20년 만에 흑자 전환을 맞이했다. 2016년 금융당국이 대물배상 관련 제도를 손보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눈에 띄게 개선된 탓이다. 손해율이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적정 손해율을 78% 안팎으로 본다.



팔로우

하지만 한방 의료계에선 “엉뚱한 핑계”라며 반발한다. 서울의 한 중형 한방병원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1조원을 넘어 전년보다 30% 넘게 상승했다. 한방병원의 자보 진료비 규모는 손보사들의 이익 규모에 비춰볼 때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업무 소관부처인 국토부의 미숙함과 의료보험체계 전문가인 복지부의 무관심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오랫동안 건강보험을 운영해온 복지부의 노하우를 국토부가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양방 병원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의 기준을 거의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지만 한방의 경우는 기존 건강보험 기준과 달라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자보 진료비 심사 업무를 맡은 심평원의 역할과 권한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평원이 자보 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이야기다. 자보에도 현지조사제도를 도입해 진료비 적정성을 심사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현지조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로 생각하면 쉽다. 조사팀이 의료기관을 찾아가 최근 3년간 진료 기록을 전수 조사하는 식이다. 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의료기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반면 현행 현장심사제도는 일상적으로 청구되는 진료내역에 대해 의심 가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건에 한해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하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허위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교수는 “현재 과잉진료 문제의 책임은 90% 이상이 심평원에 있다”고 단언했다. 심평원장이 결단만 내리면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건보 체계에서는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이씨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토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심사 업무는 심평원이 맡아서 하는데 상급기관인 복지부에 의뢰를 할 수 없다는 건 책임 회피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관계자는 “우리는 위탁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일 뿐 현지조사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는 복지부가 현지 조사를 하면 심평원 급여조사팀이 업무지원을 한다. 그러나 자보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명시한 법령이 없다”고 덧붙였다.

© 문상덕 월간중앙 기자



2012년 2월 국토부는 개별 보험회사가 담당하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냈다.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건물.

최대 흑자 낸 보험업계, 보험료 인하 난색 이유는

수익성이 높아지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 이익을 보험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업계 '빅3'는 사상 최대 실적이 확실히 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료 인하율은 0.7~2.7%에 그쳤다. 생색내기 수준이었다.

손해보험업계는 한방병원의 과잉·허위진료 증가를 내세워 추가 인하에 난색을 나타낸다. 한방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탓에 보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황원준 손해보험협회 의료지원팀장은 “대물배상과 별개로 대인 쪽은 지금도 손해율이 90%를 웃돌 정도로 굉장히 높다”며 “한방이 대인 쪽 발목을 잡고 있어 보험료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